

#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안 유 립\*

## 목 차

- I. 머리말
- II. 종교별 정책사 연구동향과 과제
- III. 맺음말

## I. 머리말

한 사회의 종교정책은 근대적 기본권의 핵심인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기초하는 ‘종교의 자유’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식민지 조선인의 ‘근대적’ 기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었고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를 평가하는 주요한 바로미터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식민지 근대’의 문제를 논의할 때 검토되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종교적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위치했던 국가신도와 기타 종교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천황제 국체론을 이념으로 했던 일본제국의 본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창구이기도 하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하나로 분류되는 종교계 민족운동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

---

\* 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DOI URL : <http://dx.doi.org/10.17792/kcs.2017.32..235>

한 연구 주제이다.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그간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오지 못했다. 종교정책사는 식민정책사의 한 분야이면서 개별 종교사의 일부로 연구되어 왔다. 근대 종교정책사는 현대 한국의 종교양태나 종교정책에 영향을 미친 과거사로서 한국사 내의 독립적인 연구 분야이지만, 개별 종교사의 통사적 정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다. 이러한 종교정책사 특유의 위치는 연구의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계로도 작용해 왔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에 대한 초기의 서술들은 전자보다는 후자의 필요에서 시작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기보다는 개별 종교사의 배경으로 다루어졌고, 여전히 그러한 경향이 짙게 남아있다.<sup>1)</sup>

1) 종교별 연구에 집중된 결과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에 관한 일반론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일제의 종교정책 자체가 종교별로 다른 정책적 의도를 가지고 다른 법제에 의해 복잡다단하게 실행된 탓도 크다. 이 분야의 시작점이라 할 연구는 일본에서 출간된 한석희의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未來社, 1988)이다. 하지만 이 책 역시 일본 불교·기독교의 조선 포교와 신사참배 강요정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인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도 종교정책은 개별 종교 관련 연구들에서 해당 종교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윤선자의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경인문화사, 2001)는 기독교 그 중에서도 천주교 관련 정책을, 김순석의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경인문화사, 2003)은 불교 관련 정책을, 윤이훈의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모시는 사람들, 2007)은 일제하 신종교 정책을 중심으로 일제의 종교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논문의 경우도 종교정책은 개별 종교 관련 연구의 전반부에 역사적 배경으로 다루어지는 형태가 많은데, 사실 종교정책 일반론은 논문의 분량으로 삼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논문들 중 박규태와 히라노 다케시(平野武)의 글은 현대 일본의 종교상황과 정책을 정리하면서 근대의 상황을 짧게 정리한 내용이고, 류성민과 최해경의 글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한국 종교계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일제의 종교정책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차별화되는 연구로는 김익한의 논문이 있는데 김익한은 1910년대 조선 종교정책의 변화를 일본 정치과정의 전개와 연관하여 입체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하고 있다. 박규태,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 46, 2007 ; 平野武,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종교연구』 65, 2011 ; 류성민, 『일제 강점기의 한국 종교와 민족주의-일제의 식민지

그런데 개별 종교사의 일환으로서 종교 성장사 혹은 수난사의 배경으로 서술되어 온 종교정책사의 문제는 사실 일제강점기 식민정책사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일제강점기 정책사는 민족운동사에 비해 관심이 적은 분야로, 연구성과의 축적 정도에 있어서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태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는 측면이 많다. 최근에는 일부 정책 입안자·담당자들을 분석하거나 식민지 간의 정책을 비교하는 등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 자체만을 평면적으로 분석하는 전통적인 정책사 연구의 틀을 뛰어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본국의 정책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식민지 정책의 성격 분석, 정책에 대응한 식민지인들의 움직임과 그 상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변동 상황, 정책의 주요 도구로 기능했던 식민지 법제의 구체적인 운용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규명되어야만 역동적인 정책사 서술이 가능해질 것이다. 종교정책사 역시 식민정책사의 일환으로서 동일한 한계점들을 공유하고 있어 그 극복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한계점들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려 한다. 연구사 정리는 2000년대 이후의 연구성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분류 방법으로는 일제강점기 종교위계화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의 공인교체제의 틀을 활용하겠다.

---

종교정책에 대한 한국 종교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종교』 24, 2000 ; 최혜경, 「1910년 전후 일제의 종교정책과 종교계의 민족운동」, 『동학연구』 17, 2004 ; 金翼漢, 「1910년 전후 山縣, 伊藤系의 對韓政策 기조와 종교정책」, 『한국사연구』 114, 2001.

## II. 종교별 정책사 연구동향과 과제

메이지 유신 초기 일본은 ‘신도국교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곧 이를 폐기하고, 천황제 국체론을 지지하는 국가신도를 비종교·초종교로서 공인종교의 상위에 놓는 종교체제를 확립했다. 공인종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공인’한 종교로서 종교행정의 대상이 되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공식적인 종교활동이 가능했다. 일본 본국과 식민지 조선에서 공인종교로 인정된 것은 교파신도, 불교, 기독교<sup>2)</sup>의 3가지뿐이었고 이 외의 종교들은 모두 “유사종교”로서 종교행정의 대상이 아닌 집회·결사를 규율하는 형사법제의 단속 대상이었다. 또한 국가신도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내무행정으로 특별히 관리되었고 공인종교는 문부행정의 관할, 유사종교는 경찰행정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3)</sup> 이같이 일제강점기 종교체제는 ‘국가신도-공인종교-유사종교’라는 차별적인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었고 공인종교 내에서도 교파신도와 불교, 기독교를 규율하는 각각의 법제가 존재하는 매우 복잡한 구조였다.<sup>4)</sup>

### 1. 비종교

#### 1) 국가신도

메이지 초기의 ‘신도국교화’ 정책이 포기된 후 국가신도는 종교성을 부정

---

2) 여기서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일제강점기 공인종교의 하나로 취급된 기독교라는 범주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양자는 큰 틀에서는 동일한 법령의 적용대상이기도 했다. 내용 중에서 구별이 필요한 경우는 각각 ‘천주교’와 ‘개신교’로 표기하겠다.

3) 경찰행정은 일본에서는 내무행정에 속해있었지만, 조선의 경우 무단통치 시기 경무총감부는 내무부 소속이 아닌 총독부 직속기구로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4) 일본의 경우 1939년 종교단체법이 제정되어 공인종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규가 늦게나마 등장했지만, 조선에는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하는 ‘신사비종교론(神社非宗教論)’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위에 존재하는 국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sup>5)</sup> 따라서 국가신도는 공인종교체제 속에서 비종교로 주장되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sup>6)</sup> 국가신도는 근대국가 일본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천황제 국체론을 지지하기 위한 국교로서 일반적인 종교를 초월하는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신도에 관한 연구는 국가신도체제의 형성과정, 국가신도의 이념 등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이념을 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종교, 교육, 치안, 경찰제도 등과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신도 연구는 교육칙어를 중심한 일제강점기 교육체제와 사회교화정책,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사참배문제나 종교통제·사상통제 관련 연구를 위한 전제가 되는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종래 일제강점기 조선의 국가신도에 관한 연구는 신궁·신사의 진출과 건립문제, 신사참배문제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초기 연구는 손정목의 논문들을 시작으로<sup>7)</sup> 일본 신사의 한반도 진출과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을 전반

5) 국가신도는 근대 천황제국가의 국가종교로, 일본의 전통적 종교인 신사신도를 皇室神道와 결합시킨 것이다. 국가의 제사가 된 신사신도는 신권 천황제와 신국 일본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신도를 천황제 종교로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육칙어 등도 시야에 넣어야만 한다. 국가신도체제는 신사신도를 종교가 아닌 국가의 제사로서 위치시키고, 공인종교인 교파신도·불교·기독교를 일단 용인하면서 이외는 별도로 국가신도에 대한 존승을 요구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교였다고 할 수 있다(日本近代法制史研究會/편, 『日本近代法120講』, 57~59쪽).

6) 사실 우리 학계에서는 국가신도 연구가 미진한 결과, 국가신도의 개념이나 범주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메이지 지도층에 의해 만들어진 국교였다고 보는 입장이 다수라고 보이지만, 국가신도의 존재를 부인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또 종교적 의미에 국한하지 않고 “신사를 통해 천황제 내셔널리즘을 국민에게 교화하려 한 戰前의 사회체제”로 넓게 범주화하기도 한다(박규태, 「국가신도란 무엇인가-근대일본 국민국가와 종교」, 『종교연구』 29, 2002, 229~230쪽; 靑野正明, 『帝國神道の形成-植民地朝鮮と國家神道の論理』, 岩波書店, 2015, 13쪽).

적으로 조명한 연구들로 구성되었고,<sup>8)</sup> 보다 구체적인 주제로는 1925년 건립된 관폐대사 조선신궁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sup>9)</sup> 최근에는 경성신사를 중심한 국폐소사의 운용과 역할, 국가신도의 주요한 상징이며 도구였으나 그동안 간과되었던 신궁대마의 의미와 기능, 조선 보급 등을 밝히는 보다 구체적인 연구성과들이 등장하고 있다.<sup>10)</sup> 지역신사 연구로는 인천 거류 일본인들에 의한 인천대신궁의 건축과정과 병합 이후 국가신도체제에 법적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통해 지역신사의 역할과 기능, 신사운명을 둘러싼 식민당국과 재조일본인 사회의 이해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sup>11)</sup>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는 주로 기독교계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sup>12)</sup> 그런데 식민당국의 신사참배 강요정책은 기독교정책보다는

- 
- 7) 손정목,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強要政策研究」, 『한국사연구』 58, 1987 ; 손정목, 「일제하 扶餘神宮 造營과 소위 부여신도건설」, 『한국학보』 13권 4호, 1987.
- 8) 최석영, 「한말 일제 강점기 國家祭禮 공간의 변화」, 『한국사연구』 118, 2002 ; 김승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신사(神社)」,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79, 2007 ; 윤선자, 「일제의 神社 설립과 조선인의 神社 인식」, 『역사학연구』 42, 2011 ; 최근에는 조선, 만주와 함께 하와이에서 이루어진 신사의 진출과 역할에까지 비교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최경순, 「근대 일본인 해외이주의 궤적과 신도(神道)의 역할-제국의 확장'과 '국가정체성 강화' 간의 괴리를 중심으로」, 『일본사상』 28, 2015.
- 9) 김대호,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朝鮮神宮 건립과 운영」, 『한국사론』 50, 2004 ; 김백영, 「식민지 동화주의의 공간정치-조선신궁의 건설과 활용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009 ; 김철수, 「'조선신궁'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검토」, 『인문과학논총』 27, 2010.
- 10) 문혜진, 「일제식민지기 경성부 신사-신사 및 제신의 시기별 성격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3), 2013 ; 문혜진, 「1910~1925년 경성신사의 제사-경성신사 제전과 제신의 식민지적 성격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72, 2013 ; 문혜진, 「일제 식민지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小考-경성제국대학 윤리·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4), 2015 ; 문혜진, 「1930~1945년 神宮大廟의 배포와 가정제사」, 『한국문화인류학』 48권 2호, 2015 ; 문혜진, 「식민지 조선의 國幣小社에 관한 일고찰-국폐소사의 운영 및 제의 양상을 중심으로」, 『로컬리티인문학』 15, 2016.
- 11) 박진한, 「식민지시기 '인천대신궁'의 공간 변용과 재인천 일본인-유락과 기념의 장소에서 식민지배의 동원장으로」, 『동방학지』 162, 2013.

더 큰 틀에서 국가신도 관련 정책의 범주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신사참배 강제는 국가신도의 이념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되어 특별히 그에 불응하는 기독교세력이 주된 목표가 되기는 했지만, 기독교인만이 아닌 일본 인과 식민지인을 모두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전쟁동원을 위한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집중해 살펴본 야마구치 고이치(山口公一)의 논문은 ‘신사 참배와 기독교’로 고정된 대립구도를 뛰어넘으려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3)</sup> 야마구치는 1936년 8월의 신사제도 개정을 계기로 조선의 신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완정되었다고 보고 신사참배 강제를 가져온 전시체제가 신사정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1936년의 일련의 신사 관련법 개정 내용도 여타 연구에 비해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최근에 번역된 히우라 사토코(樋浦郷子)의 『신사·학교·식민지-지배를 위한 종교·교육』 역시 신사참배를 기독교계 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전체적인 식민정책의 구도에서 파악하고 있다.<sup>14)</sup> 또한 이 과정에서 그동안 전혀 주목되지 않았던 조선신공의 공사를 포함한 신직(神職) 등의 정책 관여, 총독부와의 연계를 밝히면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신사참배 강요정책이 이미 신공의 수신서 배포, 권학제 등을 통해 192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일본과 달리 조선의 신사정책은 신사의 비종교성을 뛰어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거가 보강되어야 하겠지만, 국가신도와 신사참배에 관한 기존의 연구시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2) 이는 손정목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시각으로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參拜强要政策研究』의 3장은 “신사참배강요와 기독교말살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손정목, 앞의 논문, 『한국사연구』 58, 1987). 기독교와 관련된 신사참배 강요정책은 기독교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3) 山口公一, 『戰時期(1937~45) 조선총독부의 神社政策』, 『한일관계사연구』 8, 1998.

14) 히우라 사토코, 『신사·학교·식민지-지배를 위한 종교·교육』,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이 책은 저자가 2013년의 교토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해 출간한 『神社・学校・植民地-逆機能する朝鮮支配』(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을 번역한 것이다.

히우라의 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신도의 이념은 신사참배 강요 이외에도 식민통치 초기부터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구현되었다. 그 중에서도 교육칙어의 적용문제와 수신서 등 학교교육을 통한 국가신도의 양태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사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sup>15)</sup> 특히 교육칙어의 대만·조선 적용문제에 대해 제국사적인 관점에서 일본 본국과 식민지 간의 정책적인 연쇄작용을 파헤친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의 책은 한국 학계에도 큰 자극이 되었다.<sup>16)</sup>

고마고메가 강조한 제국사적 관점은 아오노 마사야키(青野正明)의 연구에도 이어진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국가신도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연구자인 아오노는 그간의 논문을 집대성하여 『제국신도의 형성-식민지조선과 국가신도의 논리』를 간행했다.<sup>17)</sup> 여기서 아오노는 일본 국내에 집중된 국가신도 연구를 제국사의 관점에서 조선으로 확장할 것을 주장하면서 조선총독부에 의해 주도된 국가신도의 보급이 본래 조선에 존재하던 마을 제사나 경신송조(敬神崇祖) 관념의 이용 등을 통해 이민족인 조선인을 천황과 황조신에 귀일

15) 김순전·조성진, 「조선총독부 발간 『보통학교수신서』를 통해 본 조선교육의 현상」, 『일본문화학보』 29, 2006 ; 이병담, 『근대일본과 조선총독부 초등학교 수신교과서 비교』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강명숙, 「일제시대 제1차 조선교육령 제정과 학제 개편」, 『한국교육사학』 31(1), 2009 ;樋浦郷子, 「학교의식에 나타난 식민지 교육-현대일본의 ‘국가신도’ 논쟁과 관련하여」, 『한림일본학』 25, 2014.

16) 고마고메 다케시, 『식민지제국 일본의 문화통합』, 오성철·이명실·권경희 옮김, 역사비평사, 2008.

17) 青野正明, 『帝國神道の形成-植民地朝鮮と国家神道の論理』, 岩波書店, 2015. 다음의 논문들도 참조.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1930年代を中心に」, 『朝鮮學報』 160, 1996 ;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と敬神崇祖」, 『桃山學院大學総合研究所紀要』 28, 2003 ; 青野正明,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神社の職制・神職任用関連の法令：1936年の神社制度改編を中心に」, 『桃山學院大學人間科学』 30, 2006 ; 青野正明, 「植民地朝鮮における農村振興運動期の敬神崇祖-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に関連して」, 『桃山學院大學総合研究所紀要』 33(3), 2008 ; 青野正明,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国幣小社とその祭神-天照大神と国魂大神の合祀」, 『國際文化論集』 38, 2008 ; 青野正明, 「朝鮮總督府による神社・神祠の増設政策-村落祭祀利用の視点から」, 『國際文化論集』 39, 2009.



시키는 ‘제국신도’의 논리로 발전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이러한 작업이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총독이 부임한 1930년대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고 우가키 총독 시기의 농촌진흥운동과 심전개발(心田開發)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국가신도에 대한 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인 연구로서 일본인 고유의 전통과 역사, 종교를 토대로 만들어진 국가신도가 다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제국신도로 변용되어 나가는 과정을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제국신도 변용의 핵심인 경신숭조 관념에 대한 일본과 조선의 구체적인 양태가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시기적으로 1930년대를 중심으로 연구가 한정되어 그 이전에 조선에 도입된 국가신도의 문제나 193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신사참배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국가신도에 관한 학계의 연구는 국가신도 자체에 대한 미흡했던 종래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식민지 조선에서 국가신도의 도입·접합과 관련된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신도체제의 일본·식민지 간 차별성과 동질성을 규명하기에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제적인 면에서의 체계적 정리가 부족해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식민지 종교체제의 정비와 함께 개항 이후 일본인들 거류지를 중심으로 거류지신사로 건축되었던 신사들의 변용과정도 함께 추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유교

유교의 종교성 문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주제이다. 종교가 아니었다고 보는 입장이 대세라고는 하지만<sup>18)</sup> 조선시대의 국교였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sup>19)</sup> 그러나, 일제강점기 종교체제하에서 유교가 비종교로 규정되고 국

18) 이희재, 「일제하 李炳憲의 공자교운동의 성과와 좌절」, 『공자학』 20, 2011, 153쪽.

19) 이황직, 「국교에서 교양으로-한국의 사회변동과 유교」, 『사회이론』 38, 2010.

가·사회이념으로서의 전통적인 위치를 박탈당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면, 한말부터 등장한 대동교 등은 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유교를 종교화하려는 종교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sup>20)</sup> 따라서 유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식민정책과 종교화 운동 양쪽의 대치되는 성격을 이해하고, 유교가 조선시대를 지탱한 이념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제강점기 유교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유교 비종교화의 과정, 친일유림의 육성과 식민통치에의 이용 등에 주제가 집중되었다. 이명화의 연구는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개편되는 과정과 1920년대까지의 활동상을 검토했다.<sup>21)</sup> 이러한 조직에 대한 연구와 함께 경학원을 채우고 있는 인물들-친일유림에 대한 연구는 정육재에 의해 진행되어 경학원의 사성(司成)과 강사(講士)에 대한 역할분석과 전시체제가 등장한 ‘황도유학’의 내용과 그 주요 조직인 조선유도연합회의 활동상이 밝혀졌다.<sup>22)</sup> 친일유림의 논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친일논리의 형성과정,<sup>23)</sup> 한시(漢詩)를 통한 친일유림의 굴절상도 조명되었다.<sup>24)</sup> 최근에는 일제 초기부터 조선총독부 등 효행표창기관과 효행유형을 식민통치 시기별로 분석한 연구가 행해져 식민당국이 유교이념을 기층통치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방식이 드러나기도 했다.<sup>25)</sup>

20) 김순석, 「근대 유교계의 지각변동-대동교 만들기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2, 2012, 90~91쪽.

21)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儒敎政策(1910~1920年代)」,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1993.

22) 정육재, 「1910~1920年代 經學院의 人的 構成과 役割」, 『정신문화연구』 30, 2007 ; 정육재, 「조선유도연합회의 결성과 ‘皇道儒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2009 ; 정육재, 「20세기 초 일제협력유림의 경학원 활동-李大榮(1874~1950)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56, 2014.

23) 박영미, 『일제 강점 초기 한학 지식인의 문명관과 대일외교-친일적 경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24) 박영미, 「親日의 도구, 漢詩 그리고 클리셰(Cliché)」, 『한문학논집』 31, 2010 ; 한길로, 「전시체제가 유림 잡지 소개 한시의 성격과 그 실상-조선유도연합회의 『유도』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53, 2017.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류미나는 박사학위논문을 통해 경학원과 그 소속 교육기관인 명륜학원의 설치와 활동, 이들 기구를 통한 친일유림세력의 육성과 활동양상, 전시체제가 황민화정책과의 관련성 등을 밝혀내었다.<sup>26)</sup> 이후 연구에서는 근대일본의 국민통합 논리로서 유교이념이 활용되었던 상황과 조선 식민통치에서 드러나는 유사한 재활용 상황을 추적하고 있어 주목된다.<sup>27)</sup> 그러나 학위논문에서 추후의 과제로 설정한 일본 제국과 식민지들을 배경으로 유교를 매개로 한 지식층 동원의 ‘협력 메카니즘’의 규명작업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작업이 기대된다.

대체로 유교정책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유교가 어떤 과정을 통해 비종교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식민통치에 이용되었는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책사적으로 유교가 왜 비종교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 유교의 양태와 어떻게 접합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5) 박선영, 「일제강점기 효행표창 현황과 성격」,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26) 류미나,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經學院の研究』, 早稻田대학 박사학위논문, 2008. 다음의 논문들도 참조 류미나, 「식민지권력예의 ‘협력’과 좌절-經學院과 향교 및 문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2005 ; 류미나,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유림정책」, 『역사와현실』 63, 2007 ; 류미나, 「식민지기 조선의 명륜학원-조선총독부의 유교지식인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교육사학연구』 17(1), 2007 ; 류미나, 「일본 ‘국민도덕론’의 유입과 재생산-1910년대~20년대 경학원 활동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52, 2007 ; 류미나, 「일본제국주의 하 유교이데올로기의 변용-식민지시기 조선의 경학원 운영을 중심으로」,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류미나, 「일본의 “조선 신민화”정책과 유림 동원의 실태」, 『일본학』 31, 2010.

27) 류미나, 「19c말~20c초 일본제국주의의 유교 이용과 조선 지배」, 『동양사학연구』 111, 2010 ; 류미나, 「일본의 ‘공자묘 대중화’ 정책과 조선 내 공자묘 인식의 변화-총독부의 공자묘 개방정책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64, 2010.

## 2. 공인종교

### 1) 교파신도

교파신도는 메이지 유신 이후 신도국교화 정책의 폐기, 신불분리, 국가신도의 성립과정 등 종교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정식 교파로 공인된 신도 13파를 일컫는다.<sup>28)</sup> 이 13파는 대체로 1876년 공인된 구로즈미교(黒住教), 신도슈세하(神道修成派), 1882년 공인된 진구교(神宮教), 다이샤교(大社教), 혹은 오오야시료교, 후소교(扶桑教), 짓코교(實行教), 신슈교(神習教), 다이세이교(大成教), 온타케교(御岳教), 1886년 공인된 신도혼쿄쿠(神道本局), 1894년 공인된 미소기교(潔教), 신리교(神理教), 1900년 공인된 곤코교(金光教), 1908년 공인된 덴리교(天理教) 등 14개 교파로 분류하기도 하고, 1899년(明治32)에 해산하여 재단법인 진구호사이카이(神宮奉齋會)가 된 진구교를 제외한 13교파로 분류하기도 한다.<sup>29)</sup> 전통적으로 신도는 오랜 시간 동안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에 대한 신앙을 포함하여 불교, 기타 민간신앙 등과 결합된 매우 다종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신도의 형태에서 국가신도와 불교를 분리하고, 다시 그 일부를 교파신도로 정리한 것이므로, 교파신도는 메이지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분류되어 근대국가 일본이 공인하는 정식 종교로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다종다양한 형태, 인위적인 형성과정과 짧은 존속기간 등으로 인해 교파신도는 한일 양국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연구 주제였다. 그런 까닭

28) 관련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조. 카미벳부 마사노부, 「明治初期の宗教政策」, 『일본어문학』 53, 2011.

29) 권동우, 「교파신도와 ‘근대신화’연구의 가능성 모색 - 한국에 유입된 신도, 짓코교·신리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64, 2015, 10쪽.

30) 이들 교파신도는 일본 근대의 ‘신종교’로서 취급되기도 했고, 일본의 전통적인 神國사상을 수용하거나 이를 스스로의 교리체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했다고 한다. 천리교를 비롯한 교파신도의 신국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야규 마코토, 「天理教에서 본 일본의 神國思想」, 『일본사상』 11, 2006.

에 교파신도에 대한 정책은 물론 종교 자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국가신도에 관해 서술하면서 언급되거나 공인종교의 하나로 소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가신도와 교파신도는 큰 틀에서는 종교침략의 도구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각자의 위상과 담당역할 등에 큰 차이가 있고 종교정책도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어 정리되어야만 각자의 고유 기능과 역할 등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교파신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조선 포교상황이 국가신도와 함께 집계된 통계로 소개된 바 있고<sup>31)</sup> 경성에 설치된 신사와 제신의 성격변화를 식민당국의 정책 추이에 따라 점검한 연구,<sup>32)</sup>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유입에 따른 신사의 설치와 성격 변화들을 추적한 연구들이 있다.<sup>33)</sup> 최근 권동우의 논문은 일본에서 국가신도의 정립과 함께 교파신도가 형성되는 상황과 각 교파의 간략한 개요, 그리고 식민당국의 교파신도 관련 정책과 통계를 종합한 조선 내 포교 현황을 개괄하여 본격적인 교파신도 연구를 위해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sup>34)</sup> 교파신도 중 뒤늦게 공인된 천리교·금광교의 조선 포교와 식민당국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연구되어 이들 교파가 일본계 신종교로 취급되면서 1910년대까지 통감부·총독부의 단속 대상이었음이 밝혀졌고,<sup>35)</sup> 한편으로 일제의 무속통제정책 속에서 천리교

31) 윤선자는 2008년의 연구에서 1910년대의 신사설립 현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국가신도와 교파신도 소속 신사가 함께 집계된 조선총독부 통계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윤선자, 「일제의 神社 설립과 조선인의 神社 인식」, 『역사학연구』 42, 2011).

32) 문혜진, 「일제식민지기 경성부 신사」, 『정신문화연구』 36, 2013.

33) 한현석, 「在釜日本人社會에서의 ‘神社化’와 그 의미」, 『일어일문학』 54, 2012 ; 김윤환·한현석,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지역사회 형성과 종교-지역과 국가의 관점에서 본 불교와 신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1, 2014.

34) 권동우, 「일제강점기 교파신도 한국 유입과 분포에 대한 연구-1907년~1942년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日本佛敎文化研究』 11, 2014.

35) 이원범, 「일본계 신종교 운동의 성립과 사상- 天理敎와 金光敎를 중심으로」, 『한국종교』 23, 1998.

등과 무속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sup>36)</sup> 하지만 여전히 교파신도 분야의 연구에는 일본 내 존재양태와 관련 정책, 조선 진출과 관련 정책, 국가신도와의 연관성과 차별성, 재조일본인 사회에서의 역할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파신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공인종교였던 불교, 기독교와 다른 법제가 적용되었고 여기에는 식민당국의 차별적인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정리작업은 일제강점기 공인종교체제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 2) 불교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관한 관심은 한국 근대불교 연구의 진행과 궤를 같이 한다. 한말부터 1945년까지로 시기구분되는<sup>37)</sup> 한국 근대불교는 친일 이미지에서 자유롭지 못해 일찍부터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띄엄띄엄 연구가 진행되었고 본격적인 연구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조계종 등 불교 각종단의 역사가 편찬되고, 2005년부터 근대불교에 대한 동국대학교 불교문화 연구원의 중점연구소 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연구가 심화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사 연구도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친일문제와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사의 주된 관심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 근대 일본불교의 성격과 한반도 포교에 모아져 있다. 이들 주제에 관해서는 개괄적인 연구서가 출간되었고,<sup>39)</sup> 김순석의 책이 개항기부

36) 최석영, 「教派神道の 조선포교와 무속의 대응」, 『민속학연구』 6, 1999 ; 최석영, 「1920년대 日帝의 巫俗통제책」, 『일본사상』 2, 2000.

37) 근대불교의 기점은 대체로 1876년 개항 또는 1895년의 도성출입금지 해금부터로 잡고 있다. 한상길의 경우 이에 대해서 외부적 요인에 근거한 시기구분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한상길, 「한국 근대불교 연구와 ‘민족불교’의 모색」, 『불교학보』 54, 2010, 125쪽).

38) 한상길, 위의 논문, 141쪽 ; 김광식, 「근·현대 불교, 연구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2013, 545쪽.

터 전시체제기까지 식민당국의 불교정책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sup>40)</sup> 이로 인해 사찰령(1911)과 30본사체제의 성립, 1920년대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의 설립,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과 불교계의 활동, 전시의 교단통제정책 등 전반적인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사가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순석은 이후에도 사찰령 등에 근거한 본사 주지의 제왕적인 권한과 역할을 통해 근대불교의 주도권이 친일세력에게 놓여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sup>41)</sup> 류승주도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시행된 불교정책으로 인해 친일불교세력이 고착화되었다고 보고 심전개발운동에 대한 불교계의 적극적인 참여행태를 고찰하고 있다.<sup>42)</sup> 사찰령과 본산제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도 진행되어 사찰령의 도입과 시행, 불교계의 수용과정 등도 분석되었다.<sup>43)</sup> 그 외에도 카미벳부 마사노부(上別府正信)는 근현대를 대상으로 근대 이전 한일 불교사를 개괄한 뒤, 근현대 한일 종교정책과 불교 교단의 관계를 고찰한 성과물을 내어놓았다. 특히 일본 근대 종교정책 부분에서 중요성에 비해 정밀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일본의 종교단체법(1939)의 초안들을 불교 중심으로 간단하게나마 분석한 점이 주목된다.<sup>44)</sup> 그밖에 조선총독부의 동화정책과 함께 추진된 불교시찰단에 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sup>45)</sup>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에 대한 연구와 함께 근대 일본불교의 성격과 한반도 침투양상을 밝히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일본 근대불교에 대해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진행된 근대불교의 성립·공인과정에서 국수주의, 군국주의,

39) 정광호, 『일본침략시기의 한·일 불교 관계사』, 아름다운세상, 2001.

40)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41) 김순석, 「일제의 불교정책과 본사 주지의 권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본학』 31, 2010.

42) 류승주, 「일제의 불교정책과 친일불교의 양상」, 『불교학보』 48, 2008.

43)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제도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4) 카미벳부 마사노부(上別府正信), 『近現代 韓日 宗教政策 比較研究-佛敎教團의 變遷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2011.

45) 이경순, 「1917년 佛敎界의 日本視察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2000 ; 조성운, 「日帝下 佛敎視察團의 派遣과 그 性格」, 『선학』 18, 2007.

국가주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고<sup>46)</sup> 이는 국가신도 체제 아래의 ‘국체론 불교’로 정의되기도 했다.<sup>47)</sup> 그 중에서도 일본불교의 종파 중 정치계와 관련이 깊었던 일연종(日蓮宗)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그 국체론적 성격과 핵심 인물 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學)의 사상, 입현양정회 등의 정치단체 활동이 밝혀졌다.<sup>48)</sup> 일연종은 실제로 1930년대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만주사변의 기획자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이 신봉했던 종파로도 알려져 있어 식민정책 담당자에 대한 연구로도 발전가능한 의미있는 성과로 생각된다.

일본불교의 한반도 침투에 대해서는 일제 침략정책에 부응하거나 그 일환으로 실행되었다고 보는 일반적인 평가 아래, 개항 이래 일본불교의 포교양상과 교육·사회사업 운영상황이 정리되었다.<sup>49)</sup> 병합 전후 이회광에 의해 창립된 한국 원종(圓宗)과 일본 조동종(曹洞宗) 연합책동에 대해서는 민족불교의 반대편에 선 친일적 행위로 평가하는 견해<sup>50)</sup> 외에 불교근대화의 성격도

46) 이종수, 「근대 일본 불교계의 尊王反邪의 國粹主義」, 『불교학연구』 20, 2008 ; 원영상, 「국체론과 일본근대불교학」, 『불교학보』 49, 2008 ; 원영상, 「근현대 일본의 국가권력과 종교」, 『한국선학』 24, 2009 ; 원영상, 「일본 근대 군국주의 정책과 불교계의 수용」, 『한국선학』 24, 2009 ; 허남린, 「근대 일본에 있어서의 불교적 제국주의의 뿌리」, 『불교연구』 36, 2012.

47) 강석원·원영상, 「근대일본의 제정일치 정책과 불교계의 수용」, 『불교학보』 57, 2011.

48) 니시야마 시게루, 「日蓮主義의 天皇神話의 形成과 그 變容-田中智學에서 石原莞爾로」, 『한국종교』 24, 2000 ; 원영상, 「日蓮主義의 불법호국론과 國體論-타나카 치가쿠(田中智學)의 논리를 중심으로」, 『불교학보』 47, 2007 ; 원영상, 「일본 근현대불교의 정치단체 연구-일련종계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49) 김순석, 「개항기 일본 佛教 宗派들의 한국 침투-일본 寺刹과 別院 및 布教所 설치를 中心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1994 ; 표창진, 「구한말 일본 불교의 사상적 침투와 조선 불교계의 동향」, 『역사문화연구』 12, 2000 ; 채상식, 「日本明治年間淨土眞宗의 추이와 그 특성-한말 불교침탈 배경과 관련하여」, 『한국민족문화』 16, 2000 ; 성주현, 「1910년대 일본불교의 조선포교활동」, 『문명연지』 5(2), 2004 ; 한상길, 「한국 근대불교의 형성과 일본, 일본불교」, 『한국사상과 문화』 46, 2009 ; 재점숙, 「개항기 부산 일본불교의 교육 사업에 관한 연구」, 『비교일본학』 25, 2011.



지닌 다각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견해도 등장했다.<sup>51)</sup> 한상길도 일본 불교의 포교와 한국불교의 대응에 관한 연구에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순응이라는 부정적 평가만 하기보다는 근대불교를 모색하기 위한 측면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개화기 한국 불교계에 대한 단선적 평가를 경계하고 있다.<sup>52)</sup> 이들 논의에서 보이는 ‘불교근대화론’은 김광식에 의해 제기된 주장으로 최근 근대불교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sup>53)</sup> 친일불교-민족불교, 친일-항일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종래의 민족주의적 접근방식을 지양하여 일제강점기 불교를 친일불교로 단정하지 말고 불교근대화의 노력으로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다양하고 일면적인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근대불교 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논리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김광식도 지적하고 있듯이 앞으로 불교근대화에 대한 개념, 성격, 흐름의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만 그 정체성이나 노선 등이 명확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sup>54)</sup> 우리 역사에서 식민지 근대화, 근대성의 문제는 단순히 불교근대화만의 문제가 아닌 근대사 전체를 관통하는 목직항 주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종교학자 가와세 다카야(川瀬貴也)는 2009년 발행된 연구서에서 전통적인 정책사와는 조금 다른 각도로 조선의 종교정책에 접근하고

---

50) 김순석, 「근대 일본 불교 세력의 침투와 불교계의 동향」, 『한국학연구』 18, 2008.  
 51) 김환수, 「불교적 식민지화? 1910년대 한국 圓宗과 일본 曹洞宗 연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 『불교연구』 36, 2012.  
 52) 한상길, 「개화기 일본불교의 전파와 한국불교」, 『불교학보』 46, 2007 ; 한상길, 「일본 근대불교의 韓·中 포교에 대한 연구-淨土眞宗 奥村圓心과 小栗栖香頂의 활동을 중심으로」, 『선학』 20, 2008.  
 53) 김광식, 『한국 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 김광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 김광식, 「근·현대 불교, 연구 성과와 과제」, 『한국불교학』 68, 2013 ; 오경후, 「일제 식민정책과 조선불교의 일본화에 대한 재검토」, 『역사민속학』, 49, 2015 ; 제점숙, 「근대 한국불교의 <친일·항일> 담론」, 『비교일본학』 37, 2016.  
 54) 김광식, 앞의 논문, 2013, 556쪽.

있어 눈길을 끈다.<sup>55)</sup> 제1부 ‘종교정책과 식민지 포교’, 제2부 ‘종교와 문명을 둘러싼 언설(言說)과 학지(學知)’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는 일본불교와 일본조합교회의 조선포교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종교정책사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제2부 4장과 5장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다. 제2부 4장은 조선총독부 종교조사 촉탁을 거쳐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활동했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의 조선종교·조선불교관을 추적하여 식민종주국 일본이 식민통치에 적합하게 창출해가는 학문·지식의 전형적 형성과정과 여기서 생산된 언설들이 식민자와 피식민자 모두에게 내재화되어가는 과정을 포착하려 했다. 이어진 제2부 5장은 심전개발운동 강연집 분석 등을 통해 일본인에 의해 구축된 조선종교상이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 내에서 핵심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법제·제도 중심의 종교정책사에서 한 겹 더 들어가 식민관료적 학자의 식민지 종교연구가 식민지의 종교관으로 정형화되어 다시 정책에 반영되는 루트를 보여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시도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불교정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고, 법제 중심의 연구를 뛰어넘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정책사 연구의 기본은 법과 제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조선불교의 기본법이었던 사찰령이나 그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행해졌지만, 그 하위의 무수한 행정명령들에 대한 연구는 미답의 상태이고, 또 사찰령은 전적으로 조선불교에만 적용된 법으로 일본불교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동일한 공인종교의 하나이면서도 조선불교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규율된 일본불교의 존재양태는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부분으로 추후 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5) 川瀬貴也, 『植民地朝鮮の宗教と学知-帝国日本の眼差しの構築』, 青弓社, 2009.

### 3) 기독교

한국 근대 기독교사는 일찍부터 연구가 시작된 분야이지만, 일제강점기 기독교정책사에 한정해 보자면 그 연구는 뒤늦게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정책사에 관한 연구들이 대개 한국기독교사의 통사적인 연구들 속에서 일종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이다.<sup>56)</sup> 일제강점기의 경우 ‘기독교 민족운동’을 저해하고 탄압한 배경으로 평면적인 정책나열식의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sup>57)</sup> 이는 마치 종래의 한국근대사

56) 최초의 개신교사로 평가되는 백낙준의 『韓國改新敎史』는 1927년 예일대학 박사학위 논문(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을 1973년 국역하면서 교정·증보한 책이다. 1910년대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은 1905-1910년에 이르는 기간 통감부의 기독교정책을 간단하게 서술하면서 宣敎史적 사관하에 선교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후 민족교회론을 주창한 민경배의 『한국의 기독교회사』는 ‘민족교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기독교의 민족운동적인 성격과 역할을 강조한 연구이지만 일제는 탄압의 주체로 설정되어있을 뿐으로 구체적인 정책의 분석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여러 전공의 기독교사 연구자들이 모여 실증적인 연구를 표방했던 한국기독교사연구회의 『한국기독교의 역사』, 복음주의사관을 주장한 박용규의 『한국기독교회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백낙준, 『韓國改新敎史』, 연세대학교출판부, 1973;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민경배의 『한국기독교회사』는 1968년 “현대 신서총서”로 간행했던 『한국의 기독교회사』를 원형으로, 1972년 자료들을 추가하여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재출간되었고 이후 수정·증보되어 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기독교문사, 2006;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2, 생명의 말씀사, 2004; 이 같은 상황은 천주교사도 동일하여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된 후 수차례 번역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부터 유흥렬의 『한국천주교회사』상·하(가톨릭출판사, 1962), 조광의 『한국천주교 200년』(햇빛출판사, 1989) 등도 유사한 서술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 최근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시리즈로 발행 중인 『한국천주교회사』 중 일제강점기에 해당하는 5권(한국교회사연구소, 2014)은 그간의 정책사 연구를 반영하고 있다.

57) ‘기독교 민족운동’이라는 용어는 그간 정확한 개념·범주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오기도 했지만, 기독교인의 민족 운동인지, 기독교조직 내지 세력이 주도한 민족운동인지, 기독교 이념이 토대가 된 민족운동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역사학계에서는 사실 일제강점기 기독교계의 활동을 민족운동 보다는 일종의 사회운

가 일제의 탄압과 대응이라는 전형적인 구도를 취하고, 식민정책사에 비해 독립운동사에 치우친 연구가 진행되어온 양상과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정책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윤경로, 김승태, 윤선자의 연구 활동에 힘입은 바가 크다. 윤경로는 통감부 시기 이토 히로부미의 기독교 회유책과 일본기독교의 조선전도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105인 사건의 연구를 주도했다.<sup>58)</sup> 신사참배 강요정책을 중심으로 일제 말기의 기독교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김승태는 연구성과 외에도 각종 자료집의 편찬을 통해 정책사연구의 개척에 일조해 왔다.<sup>59)</sup>

---

동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기독교사 연구자들의 호교론적인 연구경향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한편,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제38권은 『중교계의 민족운동』(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8)이라는 제목 하에 기독교, 대종교, 불교의 민족운동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의들을 참조. 이만열, 「한국기독교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와 역사』 12, 2000 ; 최기영·한규무, 「한국기독교민족운동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12, 2000 ; 주진오, 「한국사학계에서 바라본 한국기독교사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15, 2001 ; 조광, 「한국기독교사 연구에 대한 제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98, 2012.

58) 윤경로,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一志社, 1990) ; 윤경로, 「일제의 기독교 정책과 ‘조선전도론’(I)」, 『기독교사상』 34-4, 1990 ; 윤경로, 「일제의 기독교 정책과 ‘조선전도론’(II)」, 『기독교사상』 34-5, 1990 ; 윤경로, 「일제의 초기 기독교정책과 한인 기독교계의 대응」, 『한국사연구』 114, 2001 ; 윤경로, 「초대 통감 이토의 기독교인식과 ‘조선전도론」, 『漢城史學』 24, 2009. 특히 105인 사건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보강하고 내용을 확충한 개정증보판을 다시 발행했다.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59) 김승태, 「일본신도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 신사문제」, 『한국사론』 16, 1987 ; 김승태, 「일제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990. 8 ; 김승태, 「193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신사문제 小考」,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 김승태, 「일제 말기의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2, 1994 ; 김승태, 「일제하 주한 선교사들의 신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다산글방, 1994 ; 김승태, 「1940년대 일제의 종교탄압과 한국교회의 대응의 한 유형-전남순천노회 박해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의 역사적 반성』,

윤선자는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에서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시행된 일제의 기독교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sup>60)</sup> 이 연구는 종래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포교규칙(1915) 등의 종교 법제들을 조망하고, 1920년대 기독교 회유정책으로 실시된 천주교회의 재단법인 설립과정을 밝혀내었다.<sup>61)</sup> 천주교 중심의 정책시행과 대응과정에 주제가 한정되어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 전반에는 분석이 미치지 못했으나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의 틀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직접적인 조선기독교 관련 정책사 연구는 아니지만, 일본기독교의 천황제 국체론과 신사참배 수용, 종교단체법 이후 일본정부 주도에 의한 ‘일본기독교단’의 형성과정을 정리하고 이러한 일본기독교의 흐름이 조선기독교와 연결되었던 점점과 관계를 고찰한 서정민의 『한일 기독교 관계사 연구』(대한기독교서회, 2002)는 일본 본국의 기독교정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조선 기독교정책의 위치를 환기시켜준 중요한 연구 성과이다.

이후 일제강점기 기독교정책사 연구는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기독교의 조선전도, 기독교계 사립학교 관련 정책, 신사참배 강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기독교단의 하나인 조합교회의 한국포교와

---

다산글방, 1994 ; 김승태·박혜진 엮음, 『내한 선교사 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1994 ; 김승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사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 김승태,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폐교전말」, 『한국근현대사연구』 14, 2000 ; 김승태·이명화, 「일제 말기 한국기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2006 ; 김승태, 「일제 말기 성결교회의 수난과 교단 해산」,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2006 ; 김승태,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2 ; 김승태·유진·이항 엮음, 『스코필드 박사 자료집-강한 자에는 호랑이처럼, 약한 자에는 비둘기처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60) 윤선자, 앞의 책, 2001.

61) 이들 주제와 관련해서는 윤선자의 다음 연구도 참조. 윤선자, 『한국근대사와 종교』, 국학자료원, 2002 ; 윤선자, 「일제하 종교단체의 경제적 기반 확보 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24, 2003 ; 윤선자, 「《경향잡지》의 〈관보적요〉 분석」, 『교회사연구』 44, 2014.

관련해서는 포교의 배경과 배후, 중심인물인 와타세 쓰네요시(渡瀬常吉)의 활동 등이 밝혀져 식민당국의 기획과 후원하에 이루어진 일종의 조선기독교 회유책 또는 동화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sup>62)</sup> 최근에는 와타세와 조선 포교를 위해 긴밀하게 움직였던 조합교회의 지도자 에비나 단조(海老名弾正)의 사상에 대한 분석, 조합교회의 후신으로 설립되어 총독부의 기독교정책을 선도한 조선회중교회를 이끈 유일선의 행적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져 일본기독교의 조선진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sup>63)</sup>

기독교계 사립학교 관련 정책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사립학교는 기독교 종교교육의 장이며 주력 사업이어서 교육칙어의 이념 아래 국가주도의 교육을 추진한 식민당국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대립지였다.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기독교계의 대응을 살펴본 개괄적인 연구로는 이성전의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미선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이 대표적이다.<sup>64)</sup> 이 책의 목차 구성은 병합 전후로부터 종교교육을 금지한 1915년의 개정사립학교규칙,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지정학교 문제, 1930년대의 사립학교 신사참배강요와 학교사업 철수에 이르는 과정을 식민당국과 선교사들 간의 관계구도 속에서 정리하고 있다. 즉 병합 전후 선교사들의 교육사업에의 ‘부식(扶植)’은 병합 이후 총독부 주도의 학교정책이 진행

62) 양현해, 「일본 기독교의 조선전도」, 『한국기독교와 역사』 5, 1996 ; 川瀬貴也,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日本キリスト教の植民地伝道」, 『思想史研究』 1, 2001 ; 성주현,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일본조합교회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4, 2005 ; 이현진, 「병합 초기 일본의 동화주의적 조선인 전도-일본 구미아이 교회파(日本組合教会派)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45, 2010 ; 이현진, 「한일병합 전후 일본 기독교 지도자의 조선인식-『조선』과 기독교 기관지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제국의 이동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일본어 잡지 『조선』(1908~1911)연구」, 도서출판 문, 2010.

63) 박혜미, 「일본조합교회 ‘순회교사’ 柳一宣의 생애와 친일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 홍이표, 「에비나 단조[海老名弾正]의 자유주의 신학 수용과 신도(神道)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45, 2016.

64) 李省展,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미선스쿨의 설립과 일제하의 갈등』,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되어가면서 양자 간의 ‘길항(拮抗)’관계로, 다시 ‘갈등’, ‘저항’, ‘상극’의 단계를 거쳐 1920년대 지정학교를 인정하면서도 식민지 교육체제 내로 ‘융합’되는 듯하지만 결국 신사참배로 인해 ‘이반(離反)’되고 결국 교육철폐라는 관계의 ‘와해’로 끝난다. 목차 구성도 신선하고, 교육분야에서 식민당국과 선교사를 두 개의 축으로 놓고 그 관계구도 속에서 정책을 살펴보는 시선은 정태적인 정책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선교사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 방면에서 펼쳐진 헤게모니 경쟁으로 분석되기도 하는데<sup>65)</sup> 이 책은 그런 관점에서 보아도 흥미있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책의 제목에도 나타난 대로 식민당국의 대응축인 기독교계 근대교육의 주체는 선교사들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종래의 기독교 관련 교육사연구가 선교사들이 주도한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탓도 있겠지만, 자료의 이용에서도 조선교회가 남긴 기록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sup>66)</sup> 그 외에도 이진구는 메이지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교육과 종교교육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여 기독교계와 일제의 충돌을 서구 근대의 종교자유 담론을 토대로 살펴보고 있고,<sup>67)</sup> 박균섭은 일제 말 선교사들의 교육철폐와

65) 박명규·김백영, 「식민 지배와 헤게모니 경쟁-조선총독부와 미국 개신교 선교세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2, 2009.

66) 이성전 연구의 부족한 점을 일부나마 메워 줄 수 있는 최근의 연구가 박혜진의 『일제하 한국기독교교와 미션스쿨』이다. 박혜진은 1920년대 기독교계 학교의 지정학교 승격운동과 선교사들의 교육철폐 사건에서 한국인들이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과정과 철폐 이후의 기독교계 학교들을 지켜내려는 노력들을 상세하게 파헤치고 있다. 박혜진, 『일제하 한국기독교교와 미션스쿨』, 경인문화사, 2015 ; 또한 장규식·박현욱의 연구도 사립 각종학교의 고보승격과 지정인가 문제를 ‘식민 교육·민족교육·기독교 교육의 삼각구도’로 확대해 분석틀을 넓히고 있다(장규식·박현욱, 「제2차 조선교육령기 사립 중등학교의 정규학교 승격운동과 식민지 근대의 학교공간」, 『중앙사론』 32, 2010).

67) 이진규, 「일제의 종교/교육 정책과 종교자유 문제-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38, 2005.

관련한 식민정책적 배경에 주목하여 1930년대의 심전개발론과 관련 정책들을 점검하였다.<sup>68)</sup>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와 관련된 연구들도 기독교정책사 중 주요 주제이다. 그러나 연구의 총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신사참배에 대한 기독교계의 대응연구가 주가 된 까닭이다. 정책사적인 시각에서 이 분야의 연구는 한석희에 의해 1910년대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신사 관련 정책들과 기독교계의 대응양상이 정리되고,<sup>69)</sup> 김승태에 의해 좀 더 내용이 심화되어 왔다.<sup>70)</sup> 이로써 일본 국가신도의 확립과 강제병합 이후 조선 신사 제도의 정비, 1910년대~1920년대 제일(祭日)의 요배(遙拜), 천황 조선신궁 진좌제 참여 등으로 조선에서 행해진 신사참배를 둘러싼 정책들과 기독교계와의 갈등, 1935년 평남지사 야스타케 타다오(安武直夫)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강요로 야기된 교육철폐, 전시체제기 기독교인들의 신사참배와 기독교계의 부일협력에 이르는, 신사참배 강요정책의 잘 알려진 틀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구라타 마사히코(蔵田雅彦)는 조선의 식민지배는 천황제 국가의 확장으로 이념적으로 기독교와 대치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여 천황제 국가의 종교정책에 방점을 둔 신사참배문제를 고찰했다.<sup>71)</sup> 윤선자는 1920년대에는 신사참배에 대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본 교구장·주일교황사절의 요청과

68) 박근섭, 「心田開發論과 教育引退問題」, 『일본학보』 47, 2001.

69) 한석희, 「신사참배의 강요와 저항」, 『한국기독교와 신사참배문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

70) 각주 59) 참조.

71) 蔵田雅彦, 「日本統治下朝鮮における神社参拜問題と聖潔教会弾圧事件」, 『桃山学院大学キリスト教論集』 26, 1990; 蔵田雅彦, 「近代天皇制國家の宗教政策とキリスト教-日本統治下朝鮮を中心にして」, 『國際文化論集』(桃山学院大学) 2, 1990; 蔵田雅彦,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일본의 천황제와의 갈등관계에 대한 역사적고찰」, 『한국기독교사연구』 30, 1990; 蔵田雅彦, 「天皇制國家の朝鮮植民地支配と文化・宗教政策」, 『韓國史研究會論文集』 29, 1991.



교황청·일본 정부 간의 교섭으로 1930년대 신사참배를 허용하게 되는, 개신교와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걸었던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과정을 정리했다.<sup>72)</sup>

한편, 1930년대 신사참배 강요정책에 대해서는 식민당국과 선교사들 외에도 다양한 집단들의 배후교섭과 영향이 파헤쳐지고 있는데, 안종철은 신사참배에 대한 당시 미국정부의 입장과 선교사들의 입장 차이, 선교사들의 대응에 대한 미국정부의 외교적·국제관계적 고려와 중재 노력 등, 당시 조선총독부와 선교사, 조선 주재 미국총영사와 미국 정부 사이에 벌어졌던 물밑작업들을 분석하고 있다.<sup>73)</sup> 식민당국의 정책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고마고메 다케시의 제국사적인 관점이 투영된 연구가 단연 돋보인다. 최근 연구에서 고마고메는 1932년 일본 조치대학의 신사참배 거부사건, 1932년 평양 기독교계 학교들의 위령제 불참배사건, 1934년 신사참배문제로 발생한 타이난장로 중학 배격운동, 1935년 조선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사건을 연결하여 일본 국내-대만-조선에서 발생한 1930년대의 신사참배 관련 정책의 연쇄성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식민통치기관 사이에 오간 통첩들과 정책담당자와 배후세력의 연결고리가 이같은 연쇄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대만총독부 문교국장으로 재임하다 평안남도 지사로 부임하여 대만과 조선에서 연속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제한 야스타케 타다오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배후세력으로 일본 국내와 식민지에 지부를 가지고 있었던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조명한 점은 매우 인상 깊고, 입체적인 정책사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연구방향으로 생각된다.<sup>74)</sup>

72) 윤선자, 앞의 책, 2001, 245~280쪽.

73) 안종철, 「일제의 신사참배강요와 미 국무부의 대응」, 『한국사연구』 145, 2009 ; 안종철, 『미국 선교사와 한미관계, 1931~194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0.

74) 駒込武, 「一九三〇年代台湾・朝鮮・内地における神社参拝問題 -キリスト教系学校の変質・解体をめぐる連鎖構造」, 『立教学院史研究』 3, 2005 ; 고마고메 다케시, 「조선에서의 신사참배 문제와 일미관계-식민지 지배와 ‘내부의 적」, 『식민지 교육연구의 다변화』, 교육과학사, 2011 ; 고마고메 다케시, 「1930년대 타이완에서의 미션스쿨 배격운동」, 사카이 나오키 외 지음, 이종고·임미진·정실비·양승모·이경미·최정옥 옮

기타 기독교정책사 연구로는 법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종래의 연구로 인해 기본적인 법제의 틀과 운용상황은 일부 밝혀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메이지 정부에서 사립학교 종교교육을 규제한 문부성 훈령 제12호(1899)와 개정사립학교규칙(1915)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종교단체법(1939)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sup>75)</sup> 최근에는 메이지 일본의 기본적인 기독교 통제법제들의 형성과 구조, 이들 법제의 식민지적 변용과 하위 행정명령들을 포함한 정밀한 운용과정, 법제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각 교단의 대응양상들에 주목한 연구가 나왔다.<sup>76)</sup> 기독교의 포교기관, 주력사업인 사립학교, 기독교계 법인의 조직과 관련하여 항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법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를 통해 일본 국내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법제 운용과 정책의 차별성과 함께 기독교 각 교단 내의 대응의 차별성과 그에 따른 정책적응의 온도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법제의 구체적인 적용과 그에 대한 대응양상이 추적되어 종래 애매하게 기술되었던 선교사와 조선교회, 장로교와 감리교, 장로교 내에서도 각 파별로 달라지는 정책에 따른 대응과 선택지의 차이 등도 비교적 분명해졌다고 생각된다. 다만 항시적인 통제법령들에 연구가 집중되어 형사법제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는 신사참배 관련 법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정책사 분야는 다른 종교분야에 비해서는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 보인다. 대표적 연구분야

---

김, 『근대 일본의 문화사 7 : 총력전하의 압과 제도』, 소명출판, 2014 ; 藤込武, 『世界史のなかの臺灣植民地支配-臺南長老教中学校からの視座』, 岩波書店, 2015.

75) 이진구, 「일제하 종교법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대응 논리」,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 이명실, 「일본 메이지 정부의 ‘문부성 훈령 12호’와 조선총독부의 ‘개정사립학교규칙’에 관한 고찰」, 『한국교육사학』 30권 2호, 2008.

76) 안유림, 「일제하 기독교 통제법령과 조선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인 신사참배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근에서야 정책의 배후관계가 조명되기 시작했고, 법제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도 미답의 상태이다. 기독교 사업에 관한 연구 역시 사립학교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이 운영한 중등 이상의 학교들에 대한 연구만 집중되어 기타 조선교회들이 운영한 소학교 등의 학교사업 등에 대한 정책사적인 접근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학교사업 이외의 사회사업들, 예를 들면 의료사업이나 고아원 등의 사회사업은 물론 기독교 관련 언론에 대한 정책사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77)</sup> 이러한 분야들에서 정책사적인 연구가 배제된 채 기독교 운동사적인 부분만 평가된다면 일제강점기 기독교사 연구는 시대와는 유리된 호교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우려가 있다.

### 3. 유사종교

“유사종교”라는 의미 속에는 개념자체에서 유사성과 사이비성을 포함하고 있어 종교인 것 같으나 종교가 아닌 집단, 다분히 허위적이고 미신적이며 사기성이 깃든 사교집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일제는 한국의 천도교 같은 신종교를 유사종교라 칭하면서, 구한말 정강의 해이, 사회의 불안 및 시세변천의 부산물로서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일제가 감시에 주력했던 대상은 흑세무민의 유사종교보다는 민족운동과 연계된 유사종교들로, 이들의 종교행위는 곧바로 치안의 문제로 간주되었다.<sup>78)</sup>

77) 기독교계 의료사업과 관련된 일제강점기 정책에 대해서는 이만열의 연구가 일부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78)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新宗教」,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73-78쪽; 박승길, 「일제무단통치시대의 종교정책과 그 영향」, 『현대한국의 종교와 사회』, 43쪽;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신종교”라는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윤이흠의 경우 천도교, 보천교, 대종교에 관한 저술에서 “민족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7; 그런데 민족종교라

일제강점기 공인종교체제에서 밀려났던 유사종교는 이 글에서 검토해온 국가신도와 유교, 공인교 3가지 이외의 모든 종교들이 포함되는 매우 큰 범주를 가지고 있다.<sup>79)</sup> 유사종교로 단속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예로는 민족종교로 불리는 천도교, 대중교, 보천교 등이 있지만 불교·기독교에서 파생된 ‘공인’되지 않은 소종파들, 교파신도로 공인되기 이전의 천리교, 무속까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유사종교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무속조사를 수행했던 조선총독부 축탁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1920년대 조선총독부 종교과에 근무했던 요

---

는 용어에는 공인 이전의 천리교 같은 교파신도를 포함할 수가 없고, 신종교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무속을 포괄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이같은 범주 문제와 일제강점기 종교체제의 위계질서를 이해하기 위해 “유사종교”라는 용어를 불가피하게 그대로 사용하고 내용에서는 “신종교”와 병용하도록 하겠다.

- 79) 유사종교의 범주와 관련하여 최근 가쓰라지마 노부히로(桂島宣弘)는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인종교와 유사종교, 비공연(非公然)종교의 구분이 1930년대까지 이어지고 유사종교는 ‘공인’과 ‘비공연’ 사이에서 일종의 회색지대로 기능하던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 가쓰라지마는 비공연종교를 비밀결사라고 하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유사종교는 비공연종교였지만 동시에 공공활동을 일정부분 인정받은 종교이기도 했다”고 하고, 또 『조선공론』을 인용하여 “조선 내의 비밀결사란 바로 종교유사단체를 일컫는다”면서 향간에 ‘유사종교=비밀결사’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공연종교’는 종래의 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용어이고 가쓰라의 설명대로라면 굳이 유사종교와 구별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향후 관련 자료의 제시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듯하다. 한편, 아오노 마사아키는 조선에서는 종교적 결사가 공인단체, 비공인단체, 비밀결사로 명확히 구분되어 비공인단체를 포괄하는 명칭으로 종교유사단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여기서 유사종교의 개념이 파생되었고 종교유사단체(비공인종교)의 비밀포교를 적발하는 것이 당국의 단속의 중심이었다고 보았다. 즉 아오노는 유사종교를 비공인종교를 아우르는 폭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가쓰라지마와는 다른 범주를 채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종교의 개념·범주에 관한 불일치는 관련 연구의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가쓰라지마 노부히로, 「종교 개념과 국가신도론」, 『종교와 식민지 근대』, 책과함께, 2013, 160~167쪽; 아오노 마사아키,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유사종교」, 『종교와 식민지 근대』, 책과함께, 2013, 160~167쪽).

시가와 분타로(吉川文太郎)의 책으로까지 기원이 올라가지만,<sup>80)</sup> 해방 이후 1960~70년대 전북대·원광대 등에 종교 관련 연구소들이 만들어지면서 자료수집과 기초연구들이 시작되고 1990년대 이후 종교별로 심화된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다.<sup>81)</sup>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신종교들의 창설과정과 교리·사상, 민족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정책사로 한정해 보면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유사종교 정책에 관해서는 윤선자의 논문과 윤이흠의 책이 전 시기를 다루는 정책 일반을 관련 법제들과 함께 정리하고 있고,<sup>82)</sup> 그 외에는 대체로 개별 종교와 관련해서 연구되고 있다. 종래의 연구들에서 유사종교 정책에 관한 공통적인 견해는 유사종교에는 공인종교들에 비해 처음부터 강력한 통제 내지는 탄압정책이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통감부시기부터 시행된 보안법과 신문지법, 출판법, 집회취체에 관한 건이 유사종교를 대상으로 적용되었고 병합 이후에는 포교규칙의 공포로 공인종교와의 구별이 확정되면서 지속적으로 경찰의 통제를 받았으며 3.1운동 이후의 ‘문화통치’ 시기에는 유희책을 가장한 분열정책으로 활동의 방해를 받다가<sup>83)</sup> 1930년대에는 대부분의 신종교 단체들이 해산 대상이 되어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80) 吉川文太郎, 『朝鮮の宗教』, 朝鮮印刷, 1921 ; 吉川文太郎, 『朝鮮諸宗教』, 朝鮮興文會, 1922; 村山智順, 『朝鮮の類似宗教』, 朝鮮總督府, 1935.

81)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들을 참조. 김홍철, 「한국 신종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 36, 2013 ; 윤승용, 「한국 신종교에 대한 종교사적 연구와 과제」, 『한국종교』 36, 2013 ; 김방룡, 「해방 전의 신종교와 불교의 관계」,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6, 2015.

82) 일제강점기 유사종교에 대한 일반론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新宗教」,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 윤이흠, 앞의 책, 2007.

83) 3.1운동 이후의 유사종교 정책에 대해서는 분열정책보다는 회유정책이 실시되어 이 시기 신종교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고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윤승용, 앞의 논문, 2013, 101-102쪽 ; 아오노 마사아키(靑野正明) 역시 이 시기는 유사종교에 대한 일본 국내의 정책변화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유희책이 실시되었다고 보았다(靑野正明, 앞의 책, 2015, 321~324쪽).

되었다고 본다. 연구 공백이 많은 전시체제기 유사종교 정책의 강화와 신종교 단체의 검거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문지현의 논문이 잘 정리하고 있다.<sup>84)</sup> 이들 연구를 통해 대강의 정책과 관련 법제에 대해서는 큰 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시체제기 유사종교 관련 법령으로 일부 연구에서 언급되어온 1936년의 유사종교 해산령에 대해서는<sup>85)</sup> 이후 연구들에서 어떤 형식과 내용의 법령인지 전혀 설명이 없어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유사종교에 적용된 법제의 자세한 내용은 아오노 마사아키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졌다.<sup>86)</sup> 아오노는 유사종교 개념의 일본과 조선 내 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1910년대 조선의 ‘종교유사단체’라는 명칭에서 비롯된 유사종교 개념이 1920년대 이후 일본으로 역으로 유입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에서의 1882년 형법상의 위경죄와 불경죄, 1908년의 신형법(1907)과 경찰범처벌령(1908), 치안경찰법(1900)과 치안유지법(1925)에 이르는 유사종교 단체에 적용된 형사법규들을 정리하고 조선의 보안법(1907),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1919), 치안유지법(1925)에 이르는 법규의 적용상황을 비교검토하고, 일본에 비해 조선에서는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치안 중시 태도가 일본에 비해 더욱 강했고 단속도 철저하게 진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오노와 마찬가지로 윤이흠도 유사종교의 개념이 포교규칙으로 공인·비공인의 구별을 통해 체계화되어 1919년에야 문부성 종교국통첩 제11호로 유사종교의 개념이 등장한 일본 보다 오히려 빨랐음을 지적하면서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은 단순히 본국과 동일한 정책이 수행을 넘어서 본국 정책의 실험장 역할까지 수행했다고 평가했다.<sup>87)</sup> 이와 관련 조선의 신종교가 유독

84) 문지현,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신종교에 대한 정책과 신종교단체」,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85) 윤선자, 앞의 논문, 2000, 101쪽 ; 윤승용, 앞의 논문, 2013, 104쪽.

86) 青野正明, 「植民地朝鮮における「類似宗教」概念」, 『國際文化論集』 43, 2010 ; 아오노 마사아키, 「조선총독부의 신사정책과 유사종교」, 『종교와 식민지 근대』, 책과함께, 2013.

87) 윤이흠, 앞의 책, 59~68쪽.

탄압을 받았던 이유를 메이지 일본이 근대국가 건설과 통치의 도구로서 정립한 새로운 ‘종교’의 개념에서 찾은 연구도 있다. 즉 일본의 종교 개념이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국안민’을 달성하려 한 조선의 신종교는 자연히 그 대척점에 서게 되어 단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sup>88)</sup>

개별 종교단체들과 관련된 정책연구는 유사종교 정책의 큰 틀을 토대로 해당 종교의 성립, 활동, 해산을 다룬 연구들 속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천도교와 보천교, 대종교에 대해서는 윤이흠의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에서 민족종교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종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 회유와 포섭, 활동금지와 해산이 다뤄지고 있다. 다만 많은 부분에서 원사료를 그대로 게재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분석으로는 부족하다 여겨진다.<sup>89)</sup> 기타 연구로는 천도교의 경우 일제 말기 종교계 동원정책과 관련된 천도교의 친일논리와 활동들에 대한 논문이 주목되고,<sup>90)</sup> 대종교의 경우 설립 초기 공주 시교당을 둘러싸고 공인종교로 인정받기 위한 총독부와의 교섭과정과 대종교의 노력을 밝힌 논문이 있다.<sup>91)</sup> 병합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던 보천교에 대해서는 1920년대 조선총독부에 의해 추진된 교단공개 정책을 중심으로 결국 공인종교가 되지 못하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과정을 추적한 김철수의 연구가 있고, 불교계 신종교라 할 수 있는 ‘불법연구회’에 관한 정책사적인 내용을 서술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sup>92)</sup>

88) 박광수·조성환, 「근대 일본의 ‘종교’ 개념과 종교의 도구화-일제시대의 종교정책과 신종교지형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4, 2016.

89) 윤이흠, 앞의 책, 2007.

90) 김정인, 「일제강점 후반기(1931~1945) 천도교 세력의 친일문제」, 『동학연구』 9·10, 2001 ; 정용서, 「일제 말 천도교세력의 친일 활동과 논리」,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011.

91) 이숙화, 「대종교 설립초기 일제의 탄압과 대응 양상」, 『선도문화』 18, 2015.

92) 신순철, 「일본의 식민지 종교정책과 불법연구회의 대응」,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일본 내 미신타과정책과도 연계되어 탄압을 받았다고 알려진 무속에 대한 정책사적인 접근으로는 최석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sup>93)</sup> 최석영은 조선총독부의 무속조사를 동화이념의 창출과 정책적인 실현이라는 틀에서 고찰하면서 무속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단속하고 탄압하면서도 일본의 신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파신도로 흡수하려고 하거나 1930년대 심전개발운동과 관련하여 조선의 고유종교로 진작시키려는 동화정책이 실시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무속에 탄압 일변도의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무속은 교정과 개선의 대상이었을 뿐 심전개발운동에도 반영되지 못해 동화정책이 실행되지는 않았다는 견해도 있고,<sup>94)</sup> 경찰에 의한 단속 등을 통한 억압·말살정책과 심전개발운동을 통한 동화·회유정책이 공존했다는 주장도 있다.<sup>95)</sup> 문혜진은 숭신단체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무녀취체법규(1934)를 통한 직접적인 경찰통제 외에도 일본의 황조신이나 군인을 섬기도록 하는 정책이나 심전개발운동에 무속을 적극 활용하는 동화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분석했다.<sup>96)</sup> 무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통제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심전개발운동의 경우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시선이 다수인 듯하다. 또한 최석영의 연구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일제강점기 무속조사사업은 전통신앙이라는 무속에 대한 현재의 인식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어 담당자였던 무라야마 지준, 무속조사사업의 성격과 의도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sup>97)</sup>

17·18, 1994 ; 조경달·박맹수, 「식민지 조선에 있어 불법연구회의 교리와 활동」,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7, 2016.

93) 최석영,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서경문화사, 1997 ; 최석영, 「1920년대 日帝의 巫俗통제책」, 『일본사상』 2, 2000 ; 최석영,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 前後 조선무속에 대한 시선 변화」, 『한국무속학』 9, 2005.

94) 이용범, 「일제의 무속 규제정책과 무속의 변화」, 『역사민속학』 49, 2015.

95) 박일영, 「일제 강점기의 종교정책과 샤머니즘」, 『한국무속학』 31, 2015.

96) 문혜진, 「일제식민지기 숭신단체의 양상과 변화」, 『민속학연구』 34, 2014.

97) 최석영, 앞의 책, 1997 ; 남근우, 「일본인의 조선민속학과 식민주의-민간신앙론을



한편, 조선 내 유사종교 정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의 신종교 활동을 검토한 최봉룡의 연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98)</sup> 실제로 조선 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신종교들은 만주 지역에서 활로를 찾았지만 일제에 의해 임오교변(1942)과 같은 큰 피해들을 입기도 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신종교들의 국외 활동을 밝히는 한편, 조선보다 뒤늦게 일본제국에 편입된 만주국의 종교정책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 식민지 간의 정책적 연결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유사종교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일부 신종교 혹은 민족종교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정책사 분야의 연구도 매우 적은 편이다. 여러 형태의 종교를 포괄하는 유사종교에 대한 연구는 우선 범주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유사종교 전반에 대한 정책과 함께 개개 종교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을 정책, 법제들의 내용과 적용 상황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 내 유사종교 정책, 식민지 간의 정책들과의 비교도 필요할 것이다.

### III. 맺음말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은 당시 사회적 신앙의 대상 또는 사회이념으로 기능 하던 것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분류하고, 때로는 국가신도·교파신도와 같이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작업을 전제로 했다. 이를 통해 ‘종교’와 ‘비종교’를 유형화하고, 종교 내에서는 ‘공인종교’와 ‘유사종교’를 유형화하여 인위적으로 위계화된 체제 아래 편제시켜 별도의 법적·행정적 체계에 담당시키는 구조였다. 또한 아직 연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공인종교,

중심으로, 『종교와 식민지 근대』, 앞의 책, 2013 ; 김성례, 「일제시대 무속 담론의 형성과 근대적 재인-식민 담론의 양의성」, 『종교와 식민지 근대』, 앞의 책, 2013.  
98) 최봉룡, 『만주국의 종교정책과 재만 조선인 신종교』, 태학사, 2009.

유사종교의 범주 안에서도 별개 법제의 적용과 차별적인 정책의 적용이 일상화되어있는 중첩적인 차별의 시스템이기도 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일본 국내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체제 달성을 위한 종교근대화정책의 일환이었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종교근대화정책을 표방한 일본제국의 식민정책이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제국의 종교정책은 정책 담당자들 스스로도 별개의 수많은 법제들, 특히 법률이나 칙령 같은 상위법도 아닌 하위의 행정명령들로 이루어진 비통일적이고 복잡한 체제로 언젠가는 정비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sup>99)</sup> 복마전을 방불케 하는 종교정책의 직접적인 원인은 인위적인 종교의 대상화와 유형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근대국가화 과정에서 수입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의 일본적 변용과정, 일본국민을 대상으로 창출된 국가신도의 무리한 제국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근대일본, 제국일본에서 ‘종교’란 무엇이였는가라는 근본적 탐구로 돌아가 볼 필요도 있다.<sup>100)</sup> 결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는 전체적인 틀에 대한 성격규정을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인종교 혹은 비종교나 유사종교에 속했던 개별 부분을 연구하더라도 큰 밑그림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없으면 개별 종교·비종교·유사종교의 위치설정이나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분야

99) 메이지 초기부터 여러 차례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1939년에야 만들어진 종교단체법은 공인종교만이라도 통일된 법률로 규율하고자 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100)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제국사로서의 종교’ 연구에 주목하는 한일 학자들의 시도인 『종교와 식민지 근대』(책과함께, 2013)의 발행은 반가운 일이다. 이 책에 수록된 이소마에 준이치, 윤해동, 김태훈, 장석만의 글은 일제강점기 종교, 종교정책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소마에 준이치, 「제국사로 종교를 논하다」, 「종교 연구의 돌파구-포스트모더니즘·포스트콜로니얼 비평·포스트세속주의」; 윤해동, 「식민지 근대와 종교-종교 개념과 공공성」; 김태훈, 「1910년 전후 ‘종교’ 개념의 향방-제국사적 관점에서」; 장석만, 「일제시대 종교 개념의 편성-종교 개념의 제도화와 내면화」.

연구에서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는 종래 개개 종교별 연구경향으로 인해 오히려 소홀했던 일본 국내, 식민지 조선, 기타 일본제국의 식민지, 그리고 이들 상호 간의 종교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통합적인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의 개별적인 연구경향으로 인해 연구성과들 간의 교류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종교별, 분야별 비교연구 역시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같은 공인종교 내에서도 불교정책과 기독교정책 혹은 교파신도정책과의 비교문제, 불교 내에서도 일본불교와 한국불교의 정책적 차별문제, 국가신도와 교파신도에 대한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인종교였던 불교교단과 불교계 신종교에 대한 정책 비교 등을 통해 비종교·공인종교·유사종교 사이 또 그 내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에 대한 대응부분도 종교정책 연구에서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종교계 민족운동을 서술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정책사적으로도 중요하다. 식민당국의 정책실행에 대한 대응은 대응 자체만으로도 연구할 의의가 있지만, 때로는 정책적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정책을 동태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상호관계는 꼭 조망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식민자-피식민자 이외에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주변의 세력들, 예를 들어 서구열강, 선교사, 재조일본인 등의 활동과 역할들도 함께 다루어져야 정책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식민정책사의 일반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자·담당자 연구, 하위 행정명령들을 통한 법제의 정밀한 운용에 대한 추적도 종교정책사 연구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일본 내각문서나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조선총독부의 종교 관련 문서군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으므로 이들을 통한 연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종교정책사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와 일본제국의 성격을 정의하는데 기여하고, 보다 좁게는 종교계열 민족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종교사 연구의 호교론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대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